

“나주에 한전妍·식품妍 분원 유치를”

■ 혁신도시 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

한전 신사옥 건립 기본계획 올 연말까지 완료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소재 11개 광역시·도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함께 그동안 혁신도시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7~28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혁신도시 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혁신도시와 지역발전 방안 ▲혁신도시 투자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주요 이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및 추진 현황 설명회가 있었다.

◇혁신도시와 지역발전=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혁신도시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 ▲인구 유입 저조 우려 ▲높은 조성비가 따른 기업 유치 어려움 ▲인근의 기존 도시와 연계 발전 여부 등을 든 뒤 “참여정부의 정책을 포용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를 행정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권역별 특화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하고 광역경제권 실현 전략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광역경제권으로의 전환은 좀 더 신중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한 후 선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살고 싶은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내 연계를 강화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투자 활성화=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물론 지역별·업종별·프로젝트별 인센티

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조세 감면제도를 지양하되 탄력적인 보조금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의 투자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박노창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3차원적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평균 5~6개월 걸리는 투자 문의에서 입지 선정까지 기간을 10~15일로 단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은행 융자 지원 외에도 도 자체자금으로 연 3~6%대의 벤처기업융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

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취득·등록세·재산세 감면은 물론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기업이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적 제도를 통해 정보·기술·중개·교육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물리적 투자와 자본 투자에 우

선해 클러스터 안에서 원활한 지식 흐름 즉, 지식공유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지역에 대해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농생명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뒤 “한국전력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원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또 기존 도시개발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이전 계획=한전의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 이대훈 이천추진실 설계팀장은 “신사옥 건립 기본계획을 올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4분기까지 입찰 및 계약을 마친 뒤 바로 시공에 들어가 2012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전작업은 2012년 12월 한 달 동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전남지역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 최종보고회가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김장환 도교육감, 초·중등 장학관, 도 인재육성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 전남 농어촌교육 개선방안 뭉 뚫었다

유·초·중·고 ‘통합 캠퍼스’ 추진 전남 특성 살린 전문계 고교 육성

27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발표한 전남 농어촌교육여건개선방안은 5대 정책과제와 14개 개선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대도시 특목고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농어촌 지역 우수고에 특성화반 형태로 운영하고 유·초·중·고교를 한곳에 모아놓은 국제적 수준의 통합캠퍼스 시범 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용역의뢰를 받아 제시한 개선방안의 5대 정책과제는 ▲초·중등 선진화 학교(브랜드 학교) 육성 지원 ▲지역중심 교육여건 개선지원 ▲농어촌 교사·학생·학부모 지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기관 육성

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반과 과학반을 위한 교육시설과 교사가 대폭 확충되며 영어와 과학, 수학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뤄지고 수준별 방과후 교과학습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학생 선발은 권역별 지역 내 중학교 출신 학생할당제를 도입해 지역 내 우수 중학생을 우선해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학교’육성의 경우 지역 내 초등학교 20곳과 지역중심 중학교 10곳을 선정해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시설 등 각종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5년 동안 50억~100억 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산과 생물, 문화관광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거나, 농업과

‘브랜드 학교’ 5년간 50억~100억 지원 도서벽지·면지역 10곳에 기숙사 건립

▲지역단위 협의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이다.

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14개 개선방안 중 주요사업으로는 선진화 ‘브랜드학교’ 육성, 특성화 교육트랙 운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 고교 육성, 도서벽지·초·중 통합학교 운영, 시·군별 기숙사 건립,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 등이다.

또 유·초·중·고 통합형 캠퍼스 시범사업 추진,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계 교육기관 육성, 교육여건개선 협의회 운영, 특별법 제정 건의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성화교육트랙’ 우수고 운영방안의 경우 농어촌의 우수고교에서 특목고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인재 유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광주근교권과 서부권, 중남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2개 학교를 선정, 외국어와 과학, 인문분야 특성화반

공공디자인, 전통건축 등 전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선정하고 지역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정규직 취업을 돕기로 했다.

통학이 불편한 도서벽지와 면지역 학생을 위해 도내 10곳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유·초·중·고교를 한곳에 모아놓은 ‘통합캠퍼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이 ‘통합캠퍼스 시범사업’은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3곳에 최첨단 교육시설과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제 수준의 명문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과제별 최종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전남도 박윤식 행정과장은 “교육현장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교육여건에 따른 인구 유출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시책 추진비 10~20% 삭감 방침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광주시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광주시 시책 업무추진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대폭 삭감될 조짐이다.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 고통을 분담해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최대한 감축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6억여원에 이르는 시책 업무추진비를 10~20%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편성된 각 실·국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비교, 증감 여부를 파악한 뒤 탄

력적으로 삭감 내역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광주시가 편성한 공무원 국제화여비를 ‘불필요한 해외 시찰·견학·연수비’라며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이명자(민주·비례)의원은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안 중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견학·참관 등으로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모두 6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문화체육정책실의 경우 해외문화도시시경학에 1천500만원, 해외문화도시 운영사례 비교견학에 1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방안전본부는 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6천만원 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박람회 지원단 예산 50억 편성

여수시, 시의회에 제출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단의 내년 예산으로 50억 원가량을 편성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세계박람회 지원단의 내년 예산으로 49억 9천400여만원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세계박람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공무원과 민간인 국외출장 6억 4천만원, 여수시 준비위원회 운영 보조 사업 3억 4천만원, 남해안권 관광화보 제작 3억 원, 관광비 3천400여만원 등이다.

세계박람회기구(BIE) 국제심포지엄과 박람회 국제전문가 초청 설명회 3억 원, 박람회 유치

성공 2주년 기념행사 1억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1억 원, 박람회 성공개회 전라미련 등 포함행사 7천만 원, 국제예술공연단 초청 4천만 원 등이다.

또한 TV홍보 광고료 3억 4천500만 원을 비롯해 엑스포 성공 개회 연중 캠페인 2억 8천만 원, 전국네트워크 연계박람회 홍보 토론회 2억 원 등 광고·홍보비가 8억여 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가 내년이면 3년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전국적인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